

발간등록번호

여성인권-단행본-2021-8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 **[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톱킹처벌법)」은 2021.4.20. 제정되었으며, 2021.10.21. 부터 시행됩니다.

* **[목적]** 본 안내서는 스톱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기관의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구성]** 본 안내서는 Ⅰ.스토킹 정의 및 특성, Ⅱ.스토킹 사례와 처벌, Ⅲ.스토킹 사건 처리(수사법률기관), Ⅳ.여성폭력방지기관의 피해자 지원, Ⅴ.자주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용]** 본 자료 인용 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1), 스톱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 발 행 인 박봉정숙
- 편집·집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
- 발 행 일 2021년 8월
- 발 행 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연 락 처 02-735-1050 / FAX 02-6363-8493
- 문서등록번호 여성인권-단행본-2021-8

발간등록번호

여성인권-단행본-2021-8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I. 스토킹 정의 및 특성

■ 스토킹 정의

〈 ‘스토킹행위’ 정의 (제2조) 〉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⑤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 정의 (제2조) 〉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스토킹범죄’ 처벌 (제18조)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미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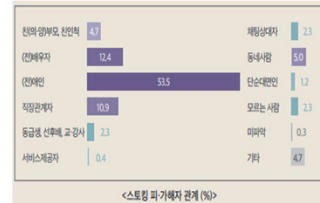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은
2021.4.20. 제정되었으며, 2021.10.21. 부터 시행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정의된 가~마에 해당되는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갖춘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되고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 스톱킹 특성

① (관계)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는 사람 또는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스톱킹 피해는 주로 (전)애인이나 (전)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 과거 함께한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톱킹 행위를 폭력의 피해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② (행위) 스톱킹 행위는 지속성·반복성을 지니며, 점차 심각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스톱킹 행위는 가해자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물리적으로 못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가 지속, 반복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 처음에는 비교적 경미한 행위(전화나 문자보내기, 선물보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특정 장소에서 지켜보기 등)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행위(주거침입, 협박, 폭언, 폭행, 납치, 강간, 살해 등)로 발전합니다.
- 따라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③ (피해) 스톱킹 피해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자는 스톱킹이 알려졌을 때 피해자가 받게 될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불이익, 이전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한 '죄책감' 등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톱킹 행위가 중단되어도 향후 대인관계를 맺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이 지속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위축된 피해자를 지지하며,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심리적, 조직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 참고: 김잔디(2015), 스톱킹 행위의 특징과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 29(3).
 김현아(2015), 스톱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7(1).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의전화(2018). 데이트폭력. 스톱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II. 스토킹 사례와 처벌

▣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는 피해 사례(스토킹처벌법 적용)

① 가족으로부터의 스토킹(가족관계였던 경우 포함)

- 결혼 후 피해자는 가해자의 괴롭힘, 반복되는 통제와 의심, 원치 않는 성관계 등으로 고통을 겪다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진행함. 가해자는 지속적인 문자와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연락하여 소재를 파악하려 시도하고 만남을 요구함.

② 연인으로부터의 스토킹(연인관계였던 경우 포함)

- 이전에 교제를 했던 직장동료인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냄. 본인이 원치 않은 대답 또는 반응을 보일 때 다시금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괴롭힘. 피해자가 수시로 전화번호 변경 후 차단을 했으나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냄
- 3년 전 헤어진 애인의 연락을 무시했으나, 가족과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함. 가해자의 반복적인 연락으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였으나, 어머니 혼자 거주하는 집에 수시로 찾아가는 등 오히려 스토킹의 대상이 확대되었음. 피해자는 동생을 비롯한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봐 불안해하며 이사를 고려 중임.

③ 온라인을 통한 스토킹

- 게임, 커뮤니티에서 소통해 본 적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SNS를 알아내서 원치 않는 댓글을 달고, DM(다이렉트메세지)을 반복해서 보내기 시작함.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고 가해자의 계정을 차단했음에도 새로운 계정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DM을 보내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 게임, 커뮤니티에서 언급했던 대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전송함

④ 모르는 사람의 스토킹

- 피해자는 언젠가부터 같은 건물에 사는 가해자가 자신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 처음엔 기분 탓이라 여겼으나, 휴가여서 나가지 않은 날에도 피해자의 출근 시간대에 가해자가 서성이는 것을 보았음. 최근에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역까지 따라오기도 하여 불안함을 느낌.
- 잡지 모델로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과 SNS로 팬들과 자주 소통함. 자신의 글에 늘 같은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 처음엔 팬인 줄 알고 친절하게 대함. 어느 날부터 자신이 SNS에 올린 장소로 찾아오기도 하여 두려움을 느꼈으나, 유명인으로서 특정인에게만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부담스러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위 사례는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으며, 신고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려운 피해 사례(타 법 적용 가능)

〈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글이나 영상 등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사례] 피해자는 친구를 통해 자신의 사진이 어떤 사람의 SNS 게시물에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 확인해보니,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캡처해서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애인인 척 글을 쓴 것을 보게 되어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임

- ▶ 스톱킹처벌법상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게** 한 경우만 명시됨
- ▶ 위 사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게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스톱킹 행위에 해당하기 어려움
- ▶ 단,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함.

〈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경우(한 번만 이루어진 행위) 〉

[사례] 피해자의 전 애인이 인스타에서 안부를 물으며 DM(다이렉트메세지)을 통해 현재 직장 등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함. 피해자는 전 애인이 자신의 직장, 사는 위치 등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으며 불안해함

- ▶ 스톱킹행위에 해당되지만, ‘스토킹처벌법’에서 일회성 피해라면 ‘스토킹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음.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알아두기 **

단 1회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를 곧바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경찰이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톱킹행위의 제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3조),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4조)

※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각 사건의 개별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Ⅲ. 스토킹 사건 처리(수사법률기관)

▣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한 수사법률 조치

구분	주요 내용
응급조치 (제3조)	1. 스토킹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 및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긴급응급조치 (제4조)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절차: 경찰→검사→법원(사후) / 기간: 1개월 이내(연장 불가)
잠정조치 (제9조) ※ 사법경찰관 신청 또는 검사 직권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절차: 경찰 → 검사 → 법원(사전) / 기간: 2·3호 2개월 이내(2회에 한하여 각 2개월의 범위 연장 가능) → 최장 6개월, 4호 1개월 이내
스토킹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제17조)	-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조치 - 경찰관서의 장은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방법 및 절차,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벌칙 (제18조/제20조/제21조)	- 스토킹범죄 시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해당 - 흉기, 위험한 물건 등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 시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미해당 - 잠정조치 불이행 시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경찰의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선조치 후 사후승인)

▣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사건 처리 과정

단계구분	담당	내용
신고접수	112치안 종합상황실	스토킹 코드 입력
초동조치	지구대·파출소	- (확인) 과거 이력 확인 - (가해자) 즉시처벌 또는 서면경고 등 - (피해자) 상담기관 및 보호제도 등 안내
수사	경찰서	- 사건접수 후 담당부서 확정 (형사과 또는 여성수사과 등)
피해자 보호·지원	경찰서	- (신변보호) 피해자 요청 후 신변보호 심사위원회 개최 후 결정 - 사후관리

〈신변보호조치 유형별 내용〉

구 분	조 치	내 용
시설	보호시설	장기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
	임시숙소	신변위험으로 귀가 등 곤란한 피해자에게 제공
인력	신변경호	위험이 긴박한 피해자 대상으로 한시적 경호 실시
	맞춤형 순찰	대상자의 생활패턴(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 실시
ICT기술	112 등록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 별도 등록·관리
	스마트워치	시계 형태의 위치추적장치 대여(경찰서)
	CCTV설치	위급 상황 시 피해자 주거지의 CCTV화면 및 비상음을 상황실로 송출, 경찰 긴급 출동
지도	가해자	경고제도 가해자 대상 위해방지조치의 일환으로 서면경고장 교부
	피해자	권고제도 관련 보호·지원 제도 및 절차 안내
기타	신원정보 변경·보호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조치 등을 통해 신원정보 보호



□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행위별 처벌 가능 규정

행위 유형	처벌 가능 규정
▶ 폭행(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	형법 폭행(제260조)
▶ 협박(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	형법 협박(제283조)
▶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 침입	형법 주거침입(제319조)
▶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 업무방해 ※ 허위사실 유포·위계는 수사과 / 위력은 형사과	형법 업무방해(제314조)
▶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전달 ※ 전화·SMS·메신저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과>, 이외에는 <사이버 수사과> 에서 담당	정통망법 공포심·불안감 유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정통망법 불법음란정보 유통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통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 전달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면회, 교제 요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 반복	경범죄처벌법 지속적괴롭힘(제3조41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편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힘	경범죄처벌법 장난전화등(제3조40호)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겁을 주어 불안, 불쾌하게함	경범죄처벌법 불안감 조성(제3조19호)

IV. 여성폭력방지기관의 피해자 지원

■ 지원서비스 확대

지원 확대	기존			변경		
	스토킹 피해가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와 중복되어야 지원 가능			스토킹 피해만으로도 지원 가능		
구분	상담	입소 보호	서비스 지원*	상담	입소 보호	서비스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	○	X	○	○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		X	○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X	X	X	○	○	○
해바라기센터	X		X	○		○
이주여성 상담소	○		X	○		○
이주여성 보호시설	X	X	X	○	○	○

※ 여가부(2021.4.),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추진」 재구성

* 서비스 지원 : 의료 및 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 여가부(2021.4.),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추진」 재구성

- 스톡킹 피해자에게 무료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V. 자주하는 질문

Q. (처벌) SNS로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자고 DM(메시지)를 보내는데 스톱킹에 해당되나요?

A. 네, 해당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스톱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단, 일회성에 그친 경우 스톱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톱킹범죄로 보기 어려우나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자 지원 또한 가능합니다.

Q. (처벌-예외) 본인의 SNS에 상대방의 사진을 캡처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스톱킹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스톱킹처벌법이 적용하려면 관련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진을 게시한다면,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욕적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정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의료지원) 스톱킹범죄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내담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신과적 치료도 가능합니다.

Q. (입소지원) 스톱킹 피해를 호소하는 이주여성도 쉼터에 입소할 수 있나요?

A. 네, 기존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법률지원) 스톱킹 피해자에 대해 무료법률지원도 가능해지나요?

A. 네, 무료로 형사, 민사, 가사 소송 등 법률구조가 가능합니다.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 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톱킹처벌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톱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톱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톱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2장 스톱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톱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톱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톱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톱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톱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톱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톱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톱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 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는 후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
 -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톱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톱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톱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예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가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④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항고)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고장의 제출) ① 제12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4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톱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톱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② 법원은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톱킹 행동의 진단·상담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1.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2.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3.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 ⑤ 제1항에 따른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8083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